
금융위원회 소관 국정과제(안) 보고

2022. 5.

금 융 위 원 회

목 차

I . 국정과제 구성	1
1. 국정과제 체계	2
2. 110대 국정과제	3
II . 금융위원회 주관 국정과제 (9개)	4
1. (국정 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5
2. (국정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지원 강화	6
3. (국정34)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7
4. (국정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8
5. (국정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9
6. (국정3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10
7. (국정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11
8. (국정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12
9. (국정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13
III . 금융위원회 협조 국정과제 (7개)	14
10. (국정 1)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15
11. (국정19)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16
12. (국정26)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17
13. (국정31)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18
14. (국정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19
15. (국정77)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20
16. (국정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21

< I >

국정과제 구성

1. 국정과제 체계

* 5.2일 12:00 기준

◇ 국정목표 6개, 약속 20개, 국정과제 110개

☞ 금융관련 약속 1개 : “디지털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 주관 국정과제 : 9개

국가 비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공정		상식		실용	
6대 국정 목표	1 상식어 회복된 반듯한 나라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치는 역동적 경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 가지	①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6) ②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4) ③ 소통하는 대통령 일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5)	④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더담을을 놓겠습니다 (7) ⑤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6) ⑥ 중소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5) ⑦ 디지털 전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4) ⑧ 하늘 땅 바다를 잇는 성장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4)	⑨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7) ⑩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7) ⑪ 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7) ⑫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행하겠습니다 (7) ⑬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4)	⑭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7) ⑮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5) ⑯ 탄소중립 실현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4) ⑰ 청년의 꿈을 지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3)	⑰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3) ⑱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7) ⑳ 과학기술 강국을 육성하고, 영웅을 기억하겠습니다 (8)	지역균형발전 특위에서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확정
국정 과제 (110개)	15개	26개	32개	19개	18개	

금융위 주관 국정과제 (9개)	1개	5개	1개	2개	-	-
---------------------------	----	----	----	----	---	---

2. 110대 국정과제

* 5.2일 12:00 기준

국정과제 (주관부처)		국정과제 (주관부처)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157개)	[약속01] 상식 과 공정 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32개)	[약속11] 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56 일상이 필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문체부) 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문체부) 58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 (문체부) 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방통위) 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문체부) 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문체부) 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문화재청)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26개)	[약속02]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 통한 주거안정 실현 (국토부) 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기재부) 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금융위) 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국토부) [약속03]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과기행안·개인정보위) 12 국정운영 방식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국조실·행안부) 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행안부·권익위·법제처) 14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인사처) 15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기재부)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9개)	[약속12]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법무부·금융위) 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법무부·방통위·여가부) 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행안부) 66 필수요로 보장을 위한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복지부)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복지부)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환경부·식약처)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국토부·경찰청) [약속13]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70 농산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식품부) 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농식품부) 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농식품부) 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해수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32개)	[약속04]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국조실) 1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산업부) 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기재부·금융위) 19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기재부) 20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신산업통상전략 (산업부) 21 에너지안보 확립 및 신산업·신시장 창출 (산업부) 22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산업부) [약속05]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23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산업부) 24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산업부) 25 바이오 분야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복지부) 26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기재부) 27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방통위·과기정통부) 28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국토부) [약속06]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9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공정위) 30 경쟁거대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공정위) 31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중기부) 32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중기부) 33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중기부·공정위) [약속07] 디지털 전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34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금융위) 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금융위) 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금융위) 3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금융위) [약속08]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국토부) 39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국토부) 40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해수부)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해수부·해경청)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8개)	[약속14]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74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과기정통부) 75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과기정통부) 76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과기정통부) 77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과기정통부) 78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과기정통부) 79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과기정통부) 80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과기정통부) [약속15]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교육부)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교육부) 83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교육부)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교육부) 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교육부) [약속16]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환경부) 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환경부) 88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환경부) 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환경부) [약속17]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국토·금융·고용·중기·교육·국방·국조실)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고용·권익·금융·복지·국조실)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국조실·법제처) [약속18]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93 북한 비핵화 추진 (외교부) 94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통일부) 95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통일부) [약속19]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96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외교부) 97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외교부) 98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외교부) 99 국력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외교부) 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외교부) 101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국정원·국방부·과기정통부·외교부) 102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외교부·산업부) [약속20]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입하기 기여하겠습니다. 103 제2차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국방부) 104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국방부) 105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국방부) 106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국방부·산업부) 107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국방부) 108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국방부·인권위) 109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보훈처) 110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보훈처)

< Ⅱ >
금융위원회 주관 국정과제

1. 【국정과제 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금융위)

□ 과제목표

- 단기간내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등 긴박한 상황에서 도입했던 대출 규제의 정상화를 추진하여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
-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를 통해 서민층 노후 주거 안정과 소득 확보 지원

□ 주요내용

-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완화) DSR 안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최대상한 완화(60~70%*→80%)를 우선 추진

* 현행 LTV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40% (생애최초 60%)
[조정대상지역] 50% (생애최초 70%)

- (LTV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생애최초 주택구입 外의 경우 주택시장 상황,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하여 LTV 합리화 추진

* (예) 생애최초 주택구입 外 가구 LTV를 지역무관 70%로 단일화하며, 다주택자 LTV를 규제지역 0% → 40·30%로 완화

-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 일반형·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주택 가격 기준 완화* 추진

* (일반형) (現) 공시 9억원 → (예) 공시 12억원
(우대형) (現) 시가 1.5억원 → (예) 시가 2억원

□ 기대효과

-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 및 서민층 노후 주거 안정 등 지원

2. 【국정과제 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지원 (기재부, 금융위)

□ 과제목표

- 기업의 투자·고용 촉진 등 민간 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 지원
- 정책금융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여 시장보완 분야 집중 지원

□ 주요내용

- (투자·고용·리쇼어링 활성화)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 기업의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 촉진을 통한 국내 투자 활성화
 -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R&D 등 세제지원 강화
 -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입 지원을 위해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리쇼어링 지원 강화
 - 정책효과는 낮으면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
- (세대 간 기술·자본 이전 촉진) 세대 간 기술·노하우·자본 이전 촉진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요건 등 합리화 등
-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정책금융이 민간의 역동적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민간금융 중복 최소화 및 시장보완 분야(미래투자 등) 집중 지원
 - 정책금융 공급은 미래핵심기술, 탄소중립 등 대규모·장기·위험분야에 중점
 - 민간금융 영역의 정책금융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정책금융 성과 평가 및 정책금융의 발전적 재편 추진
- (ESG 금융기반 마련) 금융권의 ESG 분야 자금지원 확대 및 중소·벤처기업의 ESG 실사·진단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 강화 추진

□ 기대효과

- 기업의 투자·고용·리쇼어링 촉진 및 가계의 소비 여력 확충
- 시장중심 정책금융 공급체계를 통해 역동적 혁신성장을 뒷받침

3. 【국정과제 34】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 혁신 (금융위)

□ 과제목표

- 금융행정의 자의·재량 여지 축소 및 금융권 자율성과 책임원칙 구현
- 디지털 환경 하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금융산업의 역동성 제고
- 금융회사의 디지털·플랫폼 역량 확충을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 주요내용

- (금융행정 혁신) 금융행정의 투명성·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검사·제재 시스템을 개편하고,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
- (빅테크 규율정비) 국제 논의동향에 맞추어 불완전판매 방지, 고객정보 보호 강화 등 금융분야 빅테크 그룹에 대한 규율체계를 합리적 재정비
-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인프라 및 금융보안 규제를 개선
 - 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지원
 - 오픈파이낸스 인프라를 구축하여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 촉진
-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금융-비금융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수용할 수 있는 진입체계 마련
 - 빅블러(Big-blur) 시대에 적합한 방향으로 금융회사 업무범위 규제 개선
 - 종합금융플랫폼 구축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애요인 해소
 - AI 등 IT 외부자원 활용 활성화를 위해 업무위탁 규제 합리화

□ 기대효과

- 금융산업의 자율성·역동성·경쟁력 제고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4. 【국정과제 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금융위)

□ 과제목표

-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투자자 보호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방식부터 국내 ICO 허용

□ 주요내용

-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 NFT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소비자보호 및 거래안정성 제고방안 마련
 - BIS, FSB 등 국제금융기구 및 美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체계 논의 동향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의 탄력성 확보
- (국내 ICO 여건 조성)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으로 규제 체계 확립
 -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 조성 및 규율체계 확립
 - * 필요시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 활용
 - 비증권형 코인의 경우,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 마련

□ 기대효과

- 해킹·시스템 오류 대비 보험제도 도입,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 이용자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5. **【국정과제 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금융위기재부)

□ 과제목표

- 우리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신뢰받는 시장을 구축
-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도모

□ 주요내용

- (주식·금융투자상품 등 과세제도 합리화) 개인투자자(초고액 주식보유자 제외)에 대한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 추진
- (공매도 제도 개선) 개인이 공매도 과정에서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비율(現 140%)을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등 공매도 운영 개선 추진
-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신사업을 분할하여 별도 **子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비
- (상장폐지 요건 정비) 기업 회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상장폐지 결정, 상장폐지를 단계적 추진하여 투자자 보호 강화
-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 내부자 지분매도시 처분계획을 사전 공시토록 하고, 주식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시 소액주주 보호 장치 마련
- (투명성·공정성 개선) 외부감사인 역량 강화를 통해 회계투명성을 제고 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제재 실효성 제고 등 증권범죄 대응 강화
- (외환시장 선진화) 외환시장 접근성 개선, 대외거래 규제 완화 등 외환시장 선진화 및 국부펀드 역할 확대 등을 통한 해외투자소득 제고

□ 기대효과

-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환경 조성

6. 【국정과제 3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금융위)

□ 과제목표

- 국민의 일상과 밀접히 관련된 금융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생활을 더욱 든든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금융환경을 조성

□ 주요내용

- (예대금리 공시 개선)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하고, 공시 주기도 단축(3개월 → 1개월)
 - * 은행의 금리산정체계 및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개선 추진
- (간편결제수수료) 빅테크 기업이 소상공인 등에게 부과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공시 및 주기적인 점검 추진
- (모바일 OTP 확산) 전 은행에서 모바일 OTP를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 * 모바일 OTP를 아직 도입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 모바일 OTP 도입을 유도
- (금융분쟁조정)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신속상정제(Fast Track) 도입 등을 통해 분쟁 처리기간 단축
- (펫보험)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 간편한 보험금 청구 시스템 구축 추진

□ 기대효과

- 금융서비스의 투명성·합리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
-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편의성 증대,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향상 도모

7. 【국정과제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법무부, 금융위)

□ 과제목표

- 권력형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흉악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근절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 실현
- 흉포화되는 소년범죄, 주취범죄, 무고·위증·사기 등 거짓말범죄, 불법사금융 등 서민 대상 경제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

□ 주요내용

-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법안 입법 지원 및 양형기준 강화, 아동학대 원스톱 대응 시스템 구축
-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예방 환경 개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총괄·관리, 최첨단 전자장치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 중형선고와 결합한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 추진
-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및 주취범죄 엄정대응) 국제인권기준 등을 고려하여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 소년범을 위한 통합가정법원 설치 지원, 해외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주취감정 폐지 검토
- (무고·위증·사기 등 거짓말범죄 피해자 특별 구제책 마련) 범죄 유형에 따른 무고죄 법정형 구분 검토 및 무고 등 적발 강화, 위증죄 법정형 개선 검토, 디지털플랫폼 이용 신종 사기 적극 대응 및 피해자 구제 강화
- (서민·소상공인 울리는 경제범죄 엄단) 자본시장 교란사범 및 가상자산 관련 사범 엄단, 범죄수익 철저 환수,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법집행과 피해자 지원 강화

□ 기대효과

- 코로나19 확산, 경기침체 상황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라는 국가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

8. **【국정고제 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국토·금융·고용·중·고·교육·국방·국조)

□ **과제목표**

-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 주거사다리 복원
- 청년특화 취·창업지원 확대를 통한 일자리 기회 창출
-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 및 청년의 교육 기회 확대

□ **주요내용**

- (내 집 마련) 청년·신혼·생애최초 계층에 원가주택 등 50만호 공급, 청약 및 특별공급 제도개선으로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상한 완화(60~70% → 80%)를 추진하고, DSR 산정시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 활성화 병행
- (취업지원 혁신)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해 재학 단계의 청년들에 조기개입하여 취업·경력설계 및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지방청년 위한 기업주도 프로그램 등 민·관 협업을 통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 제공
- (청년창업 기반 강화) 청소년 시기부터 창업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의 과감한 창업도전과 성장을 촉진하는 패키지형 지원체계 구축
- (미래역량 강화 지원) 신기술 분야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 확대 및 고급인재 양성 위한 연구활동 지원사업 신설 추진
 - 군복무자 원격강좌 지원사업 신설 및 학점취득 지원대학 확대
- (교육 부담 완화) 국가장학금 내실화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를 통한 학비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취업준비생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한 ‘(가칭) 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 도입

□ **기대효과**

- 2030의 내 집 마련을 통해 주거 안정과 건전한 자산 형성 기대
- 노동시장 진입 활성화 및 창업 도전·성장 촉진으로 청년 취·창업 기회 확대
- 부처 협업을 통해 신산업·신기술분야 전문인재 양성 및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하여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9. 【국정과제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고용·권익·금융·복지·국조)

□ 과제목표

- 청년세대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 사회 출발시 자립 기반 구축이 어려운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 주요내용

- (공정기반 구축) 채용 과정의 불공정성 해소 등 공정문화 확산
 - 국가자격시험제도의 불공정한 특례제도 개선 추진
 -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통한 상시 단속·점검, 신고 접수·처리 및 직권조사, 교육·컨설팅 등 추진으로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추진
 - 청년 아르바이트생 노동권 침해 시 원스톱 권리구제 서비스 지원 확대
 - 불공정 사례 모니터링 및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홍보 강화
- (자산형성 지원) 청년이 적립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지원하여 만기시 목돈이 마련될 수 있는 상품(청년도약계좌, 가칭) 출시
 -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한 세제혜택도 제공
- (취약청년 출발 지원) 취약청년 발굴·지원체계 재편 및 취약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청년도약준비금’ 신설 검토
 - 구직단념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및 취약청년(자립준비청년, 나홀로돌봄 청(소)년, 고립·은둔청년 등) 실태 파악,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확대

□ 기대효과

-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채용비리 근절로 청년세대의 공정한 기회 보장
- 청년 자산형성 지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및 청년층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으로 미래 도약 기회 보장

< Ⅲ >
금융위원회 협조 국정과제

10. 【국정과제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지영업자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중기부)

□ 과제목표

- 온전한 손실보상, 채무조정, 경영부담 완화 등 긴급구조 플랜을 추진하여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
- 기업가정신·시장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민간주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 주요내용

- (온전한 손실보상)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에 대해 데이터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
- (채무조정·금융지원) 담보·보증대출, 부실우려 채권까지 종합·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구제식 채무조정 추진, 대환보증 신설 등 맞춤형 금융공급
- (경영 부담 완화) 임대료, 세금, 공공요금 등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폐업·재도전 과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재취업·업종전환 촉진
- (경쟁력 제고) AI기반 상권정보 및 맞춤형 교육으로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성장단계별로 지원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디지털 전환) 전담인력 교육 등을 통해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스마트기술 보급 및 온라인 활용 역량 제고 지원
- (민간주도 상권회복) 민간 스스로 상권을 활성화시키도록 특화상권 육성 및 발전기금·상권기획자 제도 도입, 안심재단·동네상권발전소 조성

□ 기대효과

- 코로나19 확산 이전('19년) 수준으로 소상공인 매출 회복, 노란우산공제·고용보험 지원 확대 등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 스마트상점·공방 7만개, e커머스 소상공인 年 10만명 양성 등을 통해 소상공인·지역상권의 경쟁력 제고

11. 【국정과제 19】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기재부)

□ 과제목표

- 경제정책방향 마련 등을 통해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및 성장잠재력 제고
- 서민 물가 안정을 통한 부담 경감 및 대외부문 충격의 국내 영향 최소화

□ 주요내용

- (경제정책방향 마련) 시장 중심 저성장 극복, 생산적 복지 등 중장기 경제정책 기조 설정 및 연도별 경제정책방향 수립·이행 점검
- (안정적 거시·재정·금융 관리) 거시건전성 관리 및 재정·금융·외환 정책공조 강화, 조기경보시스템 등 리스크 관리 강화, 국제시장 선진화
- (서민 물가 안정화) 비축기능 강화, 수급안정 대책 등을 통해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요인의 국내 파급영향 최소화
 -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방안* 등 국내 생활물가 안정방안도 마련·시행
- * (예) 출하조절시설 확충,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확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등
- (대외리스크 관리 강화) 외채·외화유동성 상시 모니터링, 글로벌 신용평가사 협의 강화 등 대외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관리
 - 리스크 발생시 건전성 규제(선물환포지션 한도, 외화LCR 등)를 적시에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외화유동성 공급채널을 다변화하는 등 효과적 대응 추진

□ 기대효과

-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경제활력 및 성장잠재력 제고, 서민 물가부담 경감 등 민생 어려움 해소

12. 【국정과제 26】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기재부)

□ 과제목표

- 신기술·신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 인프라 구축
-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해소를 넘어서는 서비스 친화적 제도 마련,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및 제조업의 서비스화 촉진

□ 주요내용

- (지원기반 구축) 서비스산업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발전에 따른 융복합·신사업 모델 창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추진
- (특화제도 도입)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 및 서비스 특화제도 도입
 - 서비스 친화적 세제·금융지원 방안 마련, 서비스 KS 인증 활성화 등 제도개선
- (인프라 고도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산업 인프라 고도화
 - 서비스 R&D 투자 확대, 규제 합리화, 핵심 서비스 표준화, 서비스 산업 통계 플랫폼 구축
- (수출 활성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 서비스 수출진흥 대상 업종 확대, 수출실적 확인제 개선 및 「서비스 산업 해외진출 지원기관 협의회」 운영을 통한 수출 활성화 방안 마련
- (제조업의 서비스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을 통한 제조업 혁신
 - 서비스 융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주력산업의 사업 모델 고도화 및 제조업 전주기 혁신 추진

□ 기대효과

-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21년 62.5%), 고용비중('21년 70.7%) 및 노동생산성('19년 6.3만불) 증가 등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
- 서비스산업의 생산성·경쟁력 향상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13. 【국정과제 31】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중기부)

□ 과제목표

-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근본적 경쟁력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성과창출형 정책으로 전환
-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적 걸림돌을 찾아 제거하고, 기업 성장의 핵심요소인 생산성·기술경쟁력 향상을 견인

□ 주요내용

- (혁신성장형으로 정책개편)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기업의 혁신성·성장성 측면에서 전면 재평가하여 성장형 프로그램에 재배분
 - 빅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정책 플랫폼 구축,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상생위원회」 설치, 「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 제정 등 특단의 지원체계 구축
- (성장 저해 걸림돌 제거) 기업승계 제도 합리적 개선(업종 및 사후관리 요건 등),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 확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등 추진
- (스마트 제조혁신) ‘제조 디지털 전환 클라우드 플랫폼(DTaaS)’ 구축 및 스마트공장 2.1만개(미래형 선도 스마트공장 등) 추가 보급
-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중소기업 전용 R&D 대폭 확대, 「중기 연구장비 리스뱅크」 구축·운영,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SW·데이터 등 디지털 인력 10만명 양성
- (금융·수출·판로 패키지) 혁신기업 자금조달 체계 개선, 수출 물류비 지원 강화 및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 구축, 공공분야의 혁신제품 구매 자율성 강화
- (지역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 초광역권 선도기업 육성, 지역혁신기관(TP, 창경센터 등) 연계 강화, 지역별 위기지원센터 설치·운영(17개), 지역인재 정착지원

□ 기대효과

- 신규 공급되는 스마트공장의 40% 이상을 고도화 공장*으로 보급('21. 23%)
 - * 스마트공장 고도화 3단계(기초/고도화1/고도화2) 중 고도화 1단계 이상 공장
- 중소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R&D 비중을 1.9%('20. 1.5%)까지 확대 추진
- 수출 1천만 달러 달성 중소기업을 2,400개사로 확대('21. 2,262개사), 비수도권의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 등) 비율을 45%까지 확대('21년 41%)

14. 【국정과제 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복지부)

□ 과제목표

- 다양한 공급주체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돌봄체계로 사회서비스를 혁신

□ 주요내용

- (수요·공급 확대) 양질의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각지대 발굴
 - 청년, 맞벌이, 1인 가구 등 대상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 및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을 통한 이용자 선택권 강화
 - 사회적경제 조직 등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다변화·규모화를 통한 품질 향상으로 이용자 신뢰 향상 도모
 -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발굴시스템 정교화 및 지자체 발굴체계 강화
- (혁신기반 구축)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한 범부처-민관협업 체계 구축
 -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민관협업 활성화 및 사회서비스 혁신 지원 강화
 - ‘민관합동 사회서비스 혁신TF’* 구성·운영을 통해 공급기관 지원, 투자 활성화 방안 등 사회서비스 발전 방향 마련
- (처우 개선) 임금 가이드라인에 맞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인상, 돌봄서비스 인력의 보수체계 및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향상

* 기재부, 행안부, 고용부, 중기부 등 관계 부처 및 민간 사회서비스 기관 등 참여

□ 기대효과

- 사회서비스 혁신으로 급증하는 돌봄·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산업 발전을 통해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 구현

15. 【국정과제 77】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과기정통부)

□ 과제목표

- 전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과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국가·사회 디지털 혁신의 근간인 AI·데이터·클라우드 등 핵심기반을 강화하고, 메타버스·디지털플랫폼 등 신산업을 육성하여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도약

□ 주요내용

- (초일류 인공지능 국가)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 확보를 위해 대규모의 도전적 AI R&D를 추진하고, AI의 핵심 두뇌인 AI반도체 육성 추진('22~)
 - 대학·중소기업 등의 AI 활용을 지원하는 세계적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 (광주 AI특화 데이터센터 및 차세대 슈퍼컴 도입, '23~)하고, 재난안전·교육·복지 등 전 분야에 AI 전면 적용('22~)을 통해 AI 융합 확산
- (공공·민간데이터 대통합) 국가 데이터정책 컨트롤타워를 확립('22)하고, 민간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개방 확대, 공공·민간 데이터를 편리하게 검색·활용 가능한 기반(국가데이터플랫폼, '23~'24) 조성 등을 통해 데이터 혁신강국 도약
- (클라우드·SW 육성) AI·데이터의 핵심인프라인 클라우드·SW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분야에서 민간 클라우드 및 상용SW를 우선 이용하도록 하고, 서비스형 SW(SaaS) 중심 생태계 조성 및 SW 원천기술 확보('22~) 등 추진
- (한계돌파 新기술 확보) 국가 전략자산으로서 기술 축적을 위해 민·관 공동으로 핵심전략분야에 선택·집중한 대규모 R&D 추진으로 기술혁명 선도('22~)
-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 일상·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서비스 발굴 등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블록체인을 통한 신뢰기반을 조성('22~)
- (혁신·공정의 디지털플랫폼) 플랫폼의 건전한 혁신·성장 촉진 및 사회적 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해 발전전략 수립 및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체계 확립('22)
 - ※ 범부처·민간과 함께하는「디지털 국가전략」수립 및 민·관 합동 디지털혁신위원회 신설 검토

□ 기대효과

- '27년까지 세계 3위권내 인공지능 국가('21년 6위), 데이터시장 2배 이상 성장('21년 23조원),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점유율 5위권내 도약('21년 12위), 세계 최고수준 디지털 기술력 확보('20년 최고국 대비 88.6%→ '27년 93% 이상)

16. 【국정과제 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환경부)

□ 과제목표

- 글로벌 탈탄소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 추진
- 녹색산업·기술을 기반으로 녹색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경제 생태계 조성

□ 주요내용

- (탄소중립 이행방안 조정)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준수하되, 부문별로 현실적 감축수단을 마련하여 법정 국가계획에 반영(~'23.3월)
 -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22.9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적용('23 예산)
- (탄소무역장벽 대응)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안을 '26년부터 적용하고 (제4차 계획기간), 늘어난 수입은 기업의 감축활동을 지원하는 선순환체계 구축
- (지역·국민 탄소중립 실천) 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운영을 확대 (~'27년, 100개소 이상)하고, 지역별 대표모델로 탄소중립 그린도시 확산
 -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등 인센티브 강화로 범국민 생활실천 확대('22년~)
- (녹색분류체계 보완) EU 사례를 참고하여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 하고, '23년부터 본격 현장 적용하여 녹색 투자분야 자금 유치·지원
- (녹색산업·기술육성) '22년부터 중소·중견기업 대상 ESG 종합 컨설팅, '26년까지 환경표지 대상품목 확대 및 인증기준 강화(환경성 상위 30%)
 -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기후테크, 환경 IoT, 바이오가스 등 5대 녹색 신산업 집중 육성

□ 기대효과

- '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40% 감축('18년 727.6백만톤 → 436.6백만톤) 하면서, 녹색산업·기업의 경쟁력 제고(녹색산업 규모 30% 이상 확대)